

보사부 입양정책 갈팡질팡

금지 발표한 뒤 5년만에 번복해 물의 유관단체, 당국에 고아대책 마련 촉구

보사부는 입양특례법개정법률안 마련과 관련 해외입양 금지에 대한 기존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입양정책에 대해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사부 아동복지과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입양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해외입양을 금지한다는 것이 비현실적이며, 장애아동은 해외입양이 허용되고 정상아동은 금지된다는 것은 오

히려 국제적 비난의 여지가 높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정에 따라 이번 입양특례법 개정안에 해외입양 금지방침을 명문화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게 보사부내의 지배적인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간입양기관 관계자들과 여성단체는 보사부의 이같은 입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한다.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부 황

우익부장은 “해외입양금지방침은 정부가 처음부터 국제적 여론을 의식해 발표한 것”이라며 “지금 와서 이를 다시 번복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국내입양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고아들의 해외입양을 전면금지했을 때 국내입양이 저조한 상황에서는 대다수의 아이들이 사회복지시설이나 고아원으로

가야한다”며 “아이가 일반 가정집에서 자라는 것이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나 훨씬 낫기 때문에 해외입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오혜란씨는 “보사부는 해외입양을 금지하겠다는 발표만 했지 그동안 국내입양을 늘리기 위한 대책마련이 없었다”며 “정부가 고아수출국이라는 비난을 무마하려는 데만 급급했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작업

에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오씨는 “정부가 국내입양가정에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고아원 시설을 개선하는 등 단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며 “국내의 고아들을 우리가정에서 키우려면 정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대물림의 수단으로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보려는 자세를 강조했다.

보사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입양특례법 개정안에는 국민주택 분양시 입양가정에 일정비율 분양우선권을 주며, 입양시 양육보조금,교육비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신설된 것으로 알려졌다.